

제16회(2019-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상생을 위하여

일시 | 2019년 03월 20일 (수) 13:00~15:00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 요〉

- 제 목 :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상생을 위하여
- 일 시 : 3월 20일 수요일 오후 1~3시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프로그램 진행〉

시 간(120분)	주 요 내 용
13:00~13:10 (10분)	개회사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3:10~14:00 (50분)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00~14:30 (30분)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서울의 상생 지원 제도 및 방향 토론 1. 이윤희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토론 2.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14:30~15:00 (30분)	청중 질의/응답
15:00	폐회

〈목 차〉

[발제문]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 1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문]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19

이윤희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21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발 표 문〉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 16회 노동권익포럼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

2019.3.20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부부 둘이 일해서 한 3백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5일 일하고 하루 8시간 일해서
3백을 가져가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안 해요.
1년 365일, 하루 14, 15시간 일해야 해요. 애는 방치되어 있어요.
재일 비싼 만원엔서죠.
우리 딸은 집에서 혼자 일하니 리브이 보고 할 억어요."

-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4위.
- 1인 자영업자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이 전체의 75퍼센트.
- 서비스 산업의 자영업자들 가운데 57.0퍼센트가 50-60대.
-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퍼센트.
-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의 전체보통 가임률은 1.4퍼센트.
- 1인 자영업자의 55.4퍼센트는 주일에도 일한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 최근의 자영업자 보고서 ／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최근의 자영업자 보고서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는 누구인가



경제활동 인구의 26퍼센트
(OECD 자영업자 비율, 그리스·터키·멕시코에 이어 4위)

1차 산업 종사자 115만 명 (농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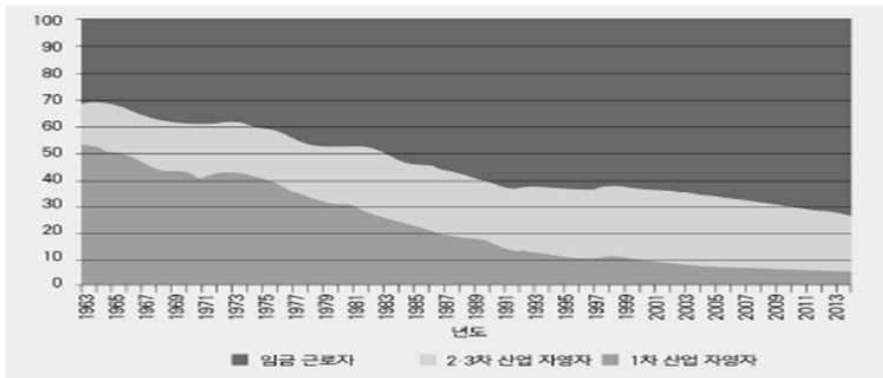
2차 산업 종사자 94만 명 (제조업·건설업 종사자 등)

3차 산업 종사자 460만 명 (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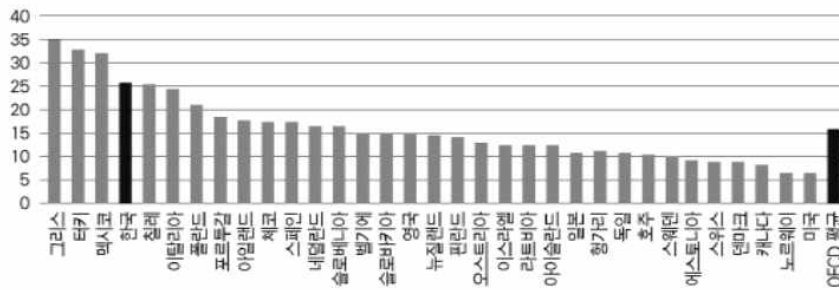
- 종업원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 28만 명
-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 277만 명
- 종업원 4인 이하 고용주 89만 명
- 무급 가족 종사자 66만 명

특수 고용직 230만 명

- 임금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 134만 명
- 자영업 범주에 속하는 96만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 OECD(2015).

지속력 자영업 과잉,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시장의 자영업 희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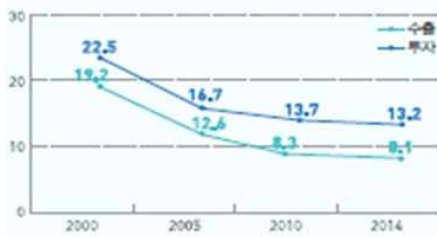


한국 자영업 시장의 피라미드



시사IN “백종원 현상과 자영업의 뒷” 2018. 11. 7.

<그림1> 수출과 투자 고용유발효과



자료 : 한국은행(원/10억 원)

<그림2> 로봇 도입률



자료 : IFR, 제조업 종사자 인명당 로봇대수(’16년)

<그림3> 대기업 해외투자(억 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4> 기업의 현금화 자산추이(조 원)



자료 : 한국은행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

우리가 듣는 낙수효과가 작동하는 방식

실제 낙수효과 작동

한국식 낙수효과

우리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The promise was that when the glass was full, it would overflow, benefitting the poor. But what happens instead, is that **when the glass is full, it magically gets bigger -- nothing ever comes out for the poor.”**

Pope Francis

낙수효과가 잘 이루어졌을때

낙수효과가 잘못 이루어졌을때

성장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 / 고용복지

성장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 / 고용복지

서비스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영세하다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보다 빛이 많다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전체의 75퍼센트

자영업자 9,812만 원
임금 근로자 7,508만 원

여성 자영업자 가운데 29.7퍼센트가 무급 가족 종사자

남성	30.0%	66.4%	3.7%
여성	18.8%	51.5%	29.7%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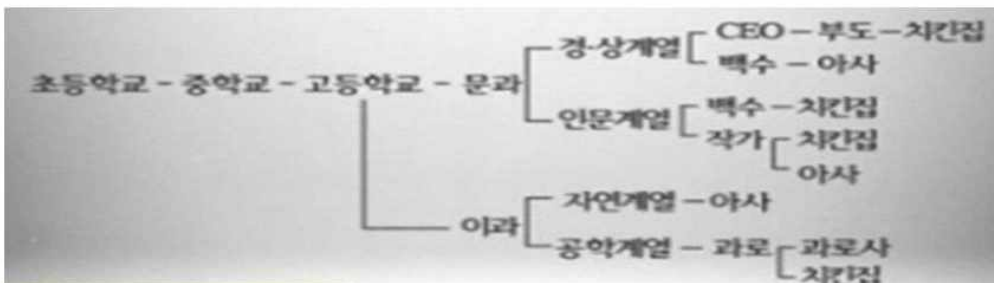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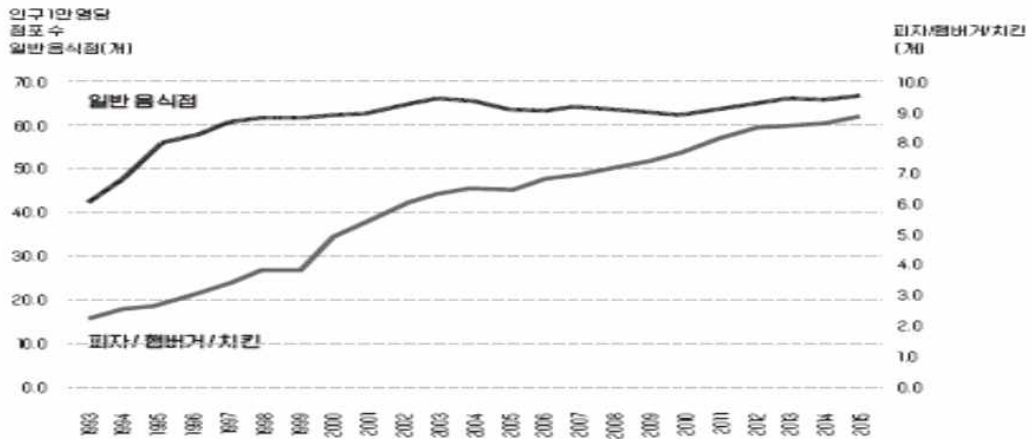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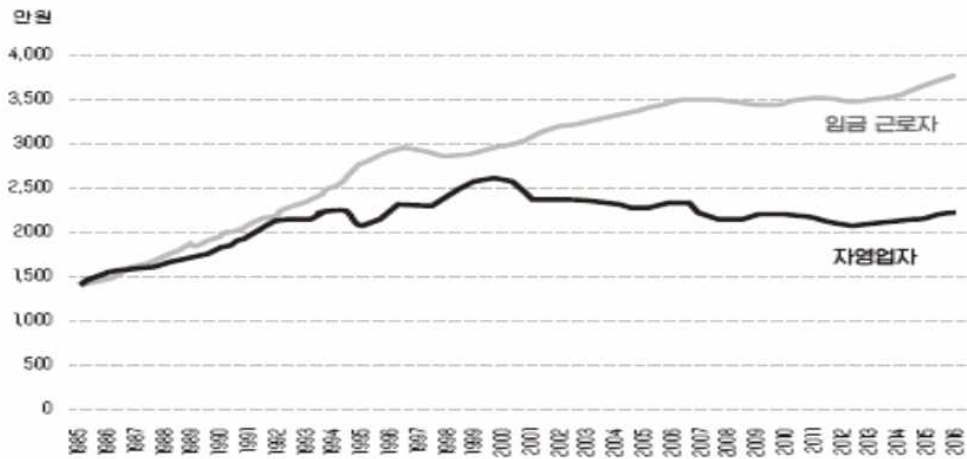
29.7%

중입 힘이 있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퍼센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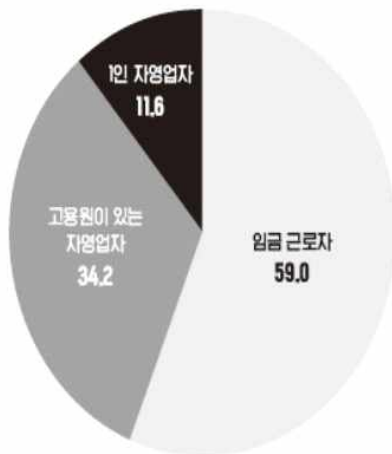


	가맹점당 영업 이익 (백만 원)	종사자 1인당 영 업이익 (백만 원)
전체	27.4	7.5
편의점	18.6	4.7
문구점	33.6	13.2
의약품	88.1	27.2
안경	48.9	17.5
한식	32.1	7.9
일식·서양식	32.7	5.6
제빵·제과	29.1	6.1
피자·햄버거	25.2	4.9
치킨	23.6	9.3
분식·김밥	22.7	7.4
주점	23.5	9.1
커피 전문점	21.1	5.0
자동차 수리	40.0	12.4
두발 미용	37.4	7.6
가정용 세탁	20.3	9.7
기타	28.8	8.0

자료: 통계청(2017)

“두 사람이 하루에 최소 13시간을 꼬박 매장에 매달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우리 부부 손에 쥘 돈은 겨우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 ... 매출이 오르는 만큼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고,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식자재비는 매출의 50%를 넘었다 ... 매출 증대에 비례해 올라가는 광고비까지 부담해야 했고, 본사는 '매출 향상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전단 수십만 원 어치를 강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달은 매출이 더 올랐음에도 수익이 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면서 박한 수익에 점주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육체노동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게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맹점 착취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통제가 그 주인공이었다.” 오마이뉴스, 2016.8.31. “1+1 피자에 숨은 비밀”

자영업자들은 주말에도 일한다



주5일 근무/개업 비율 [단위: %]

폐업자 가운데 70퍼센트가 창업한 지 5년 미만

2015년, 한 해 동안 107만 명이 창업했고
74만 명이 폐업했다.

**폐업자 가운데 70퍼센트는
창업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고,**

2년 내에 폐업한 경우도 40퍼센트에 달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자영업자들은 공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 보험 가입률 (단위: %)

		산재보험	고용 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자영업자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6	15.4	87.2	100.0
	자영자/가족 종사자	1.4	1.6	65.8	98.4
	특수 고용 종사자	3.3	3.3	42.9	87.9
임금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90.0	84.8	90.2	90.2
	임시/일용직 근로자	90.4	35.5		

Chapter 7. 자영업과 갑-을-병 관계

1. 본사-가맹점: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2. 대기업-영세상인 경쟁(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제도
3. 자영업자들의 노동3권, 연대 및 협동조합
4. '병'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

표 2 |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개혁 과제

- ① 녹장 행정 : 사건 처리 절차 지연
- ② (피해 구제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 시정 명령의 비실효성, 피해 배상 제도 미흡, 소송 수행 시 피해자나 신고인의 참여 부재
- ③ 불투명 행정 : 사건 기록 및 상대방 제출 자료의 공개 거부
- ④ 독점 행정 : 지자체의 조사 권한 불인정, 진속 고발권의 실질적 존속
- ⑤ 자의적 행정 : 심사관의 자의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 및 불복을 위한 실질적 수단의 부재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외(2015)

- **공정거래협약제도**: 가맹점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방안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매년 이행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파리바게뜨 &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 필수물품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을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

■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상생조정협의회를 설치

■ 업무내용

- 필수품목 지정, 물품공급 마진 및 로열티 조정
 - 필수품목지정, 물품공급마진, 로열티를 개별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고 동시에 진행해야 함
 - 필수품목 지정, 물품공급 마진은 본사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어 본사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해서는 시스템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가맹점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가맹점주가 최저수익보장선을 넘어설 때는 러닝 로열티를 도입해야 함
 - 러닝로열티는 매출구간에 따라 매출 정비례상승하다가 본사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을 넘어서면 다소 줄어드는 형태가 바람직

■ 구성형태

- 공익위원과 이해당사자(가맹본사, 가맹점주협의회)만 참여

박주영 (2018) "프랜차이즈 상생협력방안: 단체협상권과 구매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자영업 대책으로서의 프랜차이즈

-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인구 중 사업체 소유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 과잉 자영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솔로 자영업자(higher quality)가 다른 솔로 자영업자를 고용하여 고용주 기업가가 되도록 자극하는 것
- 프랜차이즈는 고용주 기업가를 증대시키는 시스템
-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5년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63.8%, 프랜차이즈 편의점 5년차 폐업률은 14.7%
-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

박주영 (2018) "프랜차이즈 상생협력방안: 단체협상권과 구매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가맹점지불비용	물류비 위주, 로열티는 소액	매출액 기반 정률 로열티 위주
원자재구매방법	필수물품 명목으로 본부가 전달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가맹점이 구매과정에 직접 개입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함

- 연계판매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가맹점과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많은 가맹점들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의심하기 때문
- 따라서 미국의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구매협동조합 운영을 승인하고 연계판매 계약을 포기하고, 대신 가맹점 대다수를 로열티 계약으로 전환하였음.
- 결론적으로 이들 가맹본부는 소송 등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확장 등 핵심사업에만 집중
- 이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점차 로열티 방식의 가맹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로열티 방식의 전환이 어렵다면 공급물품의 구매 규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로열티를 차등하여 받는 방안도 고려

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 브랜드 동일성·품질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
- 협회 차원 중재로 필수물품 관련 분쟁 해소

➢ 협회는 불필요한 물품들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필수물품을 지정하도록 한다.
 - 합리적인 필수물품 지정 기준 등을 담은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대한 가맹본부의 동참을 독려한다.
- 나. 협회 내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필수물품 축소를 요구하며 가맹본부와 갈등하는 경우 이를 적극 중재한다.
 - 협회 차원의 중재가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함으로써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진국 사례〉 가맹점 구매협동조합(purchasing coope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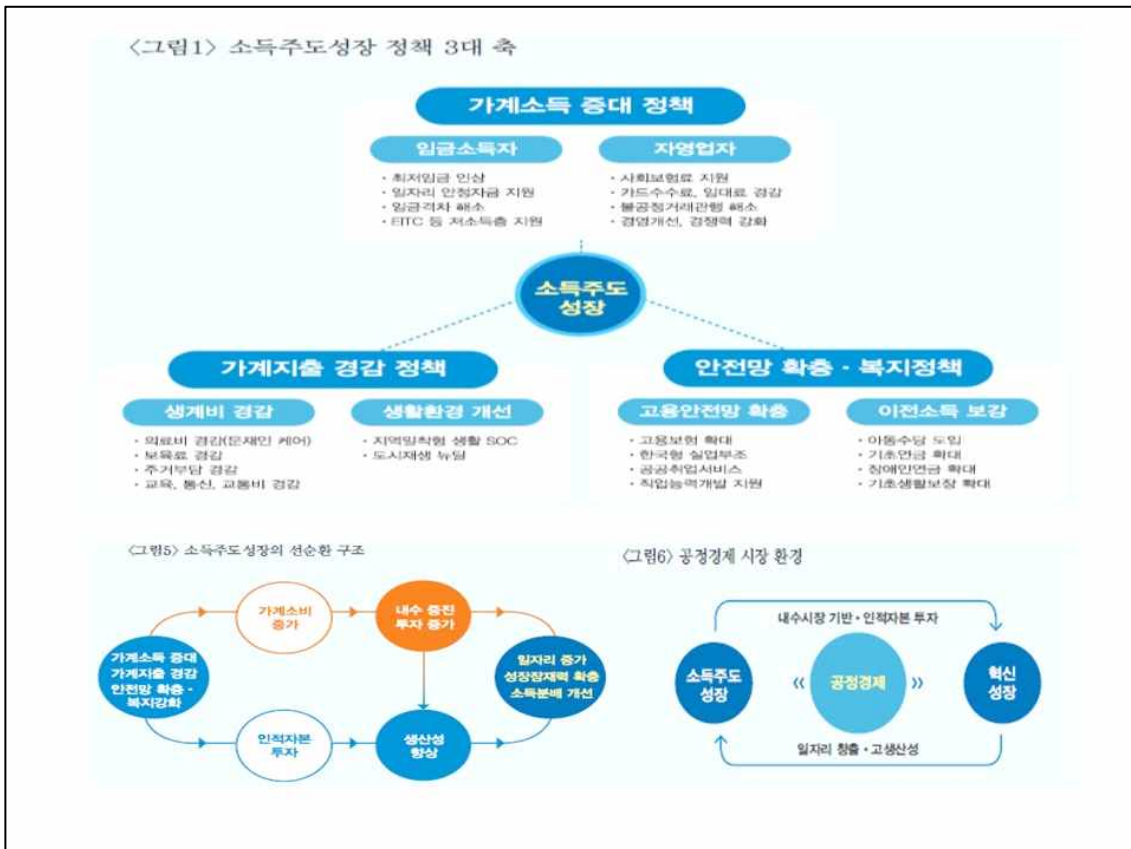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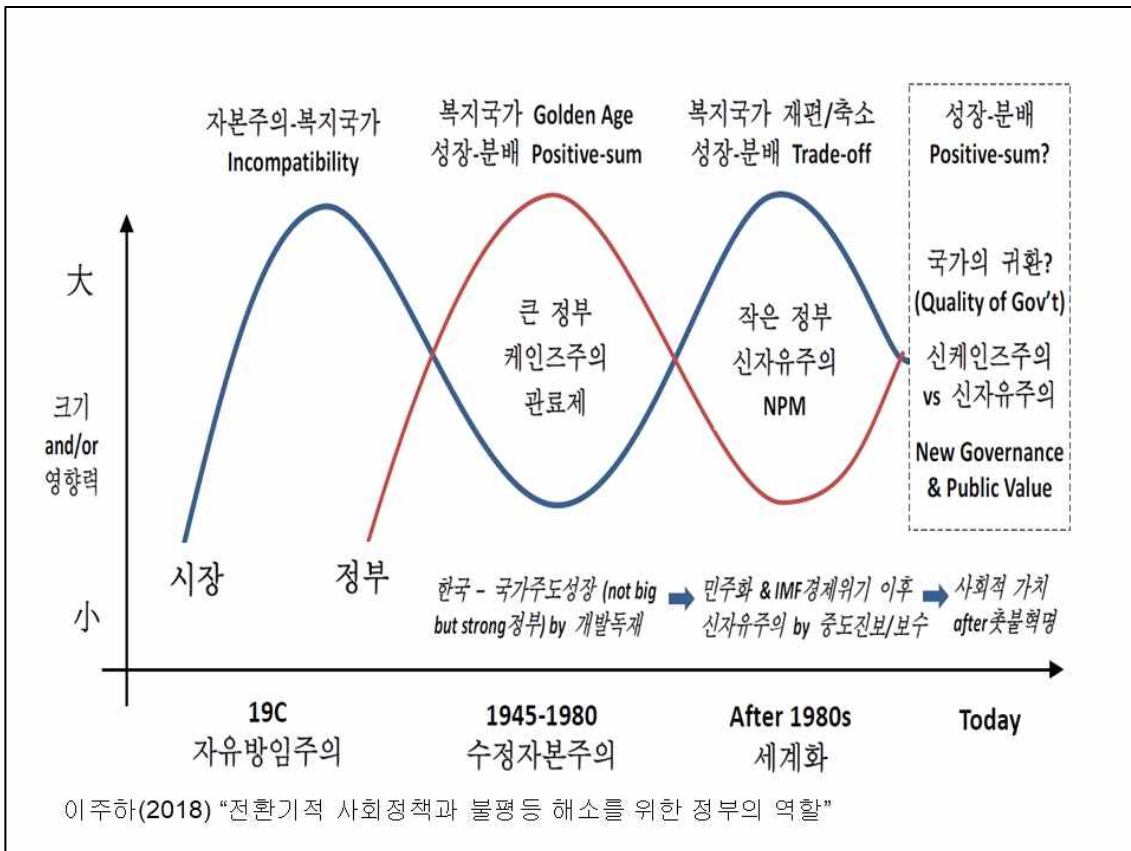
- **구매협동조합이란?**
가맹점 원·부자재 공동 구매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조직한 조합
- **등장배경**
과거 필수물품을 둘러싼 오랜 분쟁 끝에 일부 가맹본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부자재 구매에 가맹점을 참여시키기 시작
 - 미국은 원부자재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기보다 제3의 공급자를 지정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해당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가맹점들은 이 공급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이유로 불만 제기(특히, 가맹본부의 Kick-Back Rebate 수령문제 적극 제기)
- **조합운영 결과**
 - (가맹점) 대량구매를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어 수익 증대
 - (가맹본부) 가맹점 수익증대에 따른 로열티 수익 증대 및 분쟁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및 비용소모 문제 해결
- **대표적 사례**
버거킹 'Restaurant Services, Inc.', 던킨도너츠-백스킨라빈스 'National DCP', 서브웨이 'Independent Purchasing Cooperative, Inc.', 피자헛-KFC 'Restaurant Supply Chain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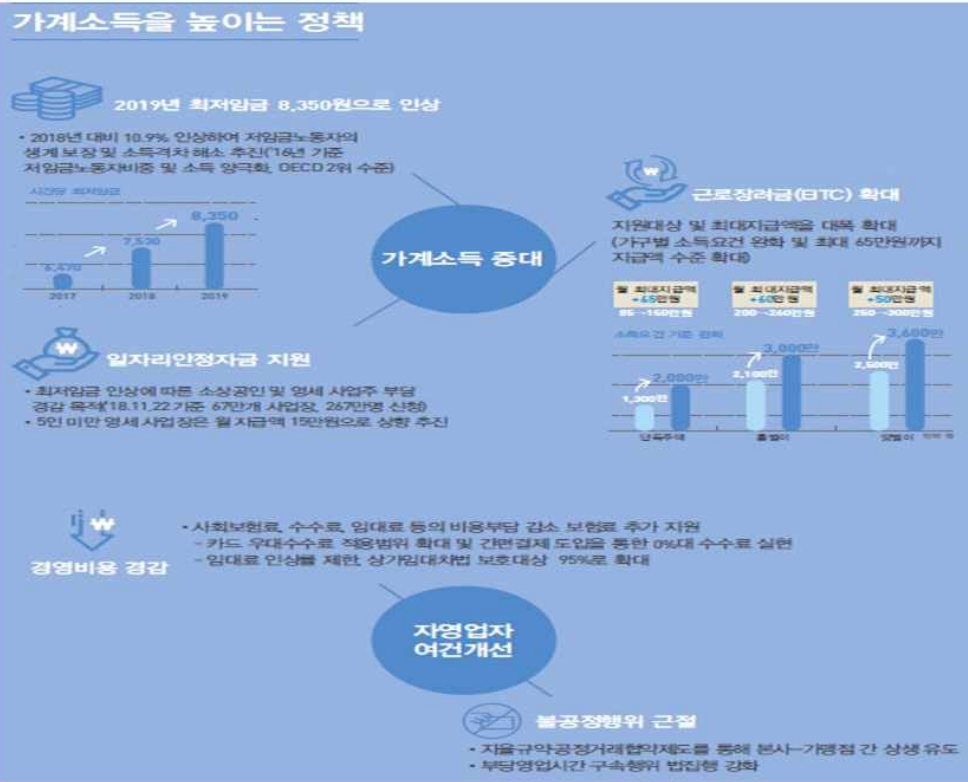
Burger King, 'Restaurant Services Inc.'



- 1991년 설립, 1992년 체결된 '운영협약' (operating agreement)에 의거해 본사와 역할 분담·지속 협력
 - (본사) 브랜드 전략·품질 유지·광고·원자재 지정 등
 - (RSI) 공급자와의 구매협상을 통해 단가를 낮춰 가맹점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 물품공급 확보
- 7,500개 이상의 복미 버거킹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버거킹 본사도 조합원 중 하나로 참여
- 본사가 '버거킹 가맹점 가입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홍보할 정도로 구매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힘

박주영 (2018) “프랜차이즈 상생협력방안: 단체협상권과 구매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영업자들의 숙원 사항인 사회보험료·수수료·임대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최대 90% 지원에 더해, 1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도 추가 지원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연매출 5억원~30억원)하고, 간편결제 도입을 통해 0%대 수수료 실현(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사업자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19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을 90~95%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둘째, 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의 축소를 유도하고, 심야영업 강제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가맹점 최소수익 보장, 매장이전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등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유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8)

▪ '18.8.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및 보완대책" 마련 발표

	과 제	추진 방안
단기적 지원	직접 지원 [6조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TC 지원 요건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경영 비용 부담 완화 [0.6조원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구조적 대응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0.4조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기 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5조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보증공급 확대, 조자금지 대출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김재진 (2018)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및 전직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지원:** '18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시 사업정리비용 및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할거원상복구 등 사업정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
- **재기교육:** 취업의사가 있는 만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교육시간 총 10시간 80% 이상 수료 시 교통비 등 1인당 3만원 지급)
- **취업지원:** 폐업 후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전직장려수당 지급:**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하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5만원(소득세 별도) 지급(신청인의 폐업·취업활동 상태에 따라 분할 지급)

표 1 | 서비스업 분야별 전체 종사자 규모 비교(2015년 기준, 단위: %)

유형	분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평균 ¹⁾	차이
유통	도·소매	14.6	17.4	14.2	13.1	11.7	14.1	0.52P
	운수·저장	5.4	5.9	4.9	5.0	5.1	5.2	0.22P
개인	음식·숙박	8.4	6.1	3.9	5.4	3.5	4.7	3.68P
	가정 내 고용	0.3	0.0	0.5	0.2	0.0	0.2	0.13P
	기타	4.9	3.3	2.8	2.8	2.6	2.9	2.05P
	예술·오락·레저	1.6	1.1	1.4	2.7	2.5	1.9	-0.29P
	정보·통신	3.0	3.4	3.0	4.0	4.2	3.6	-0.67P
사업	금융·보험	3.0	2.9	3.1	4.0	2.0	3.0	0.04P
	부동산	2.1	1.5	0.5	1.1	1.5	1.1	0.91P
	전문·과학·기술	4.0	3.4	5.6	7.0	8.5	6.1	-2.09P
사회	관리·지원	4.8	4.7	5.0	4.9	4.7	4.8	-0.03P
	정부 ²⁾	3.6	3.8	6.5	5.6	6.5	5.6	-1.96P
	교육	7.0	4.9	6.6	10.6	11.5	8.4	-1.39P
	보건·복지	6.8	12.6	12.8	13.5	15.3	13.5	-6.72P
기타	해외 기관	0.1	0.0	0.0	0.1	0.0	0.1	0.02P
서비스업 전체		69.7	70.9	70.8	80.1	79.7	75.4	-5.63P

주 : 1)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 평균이며, '차이'는 한국과 평균과의 차이이다.

2) 정부에는 사회보장 행정(예: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 행정은 국가에 따라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 기관이 담당한다.

자료: OECD(2015).

"'퇴직금만 받으면 됐지, (임금체불 사업자를 처벌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은 알바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나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은 답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다만 기존에 있는 법대로 해 달라고 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2기 위원장)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필수)
- ▶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
- ▶ **지원금 지급:** 현물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제가 과격하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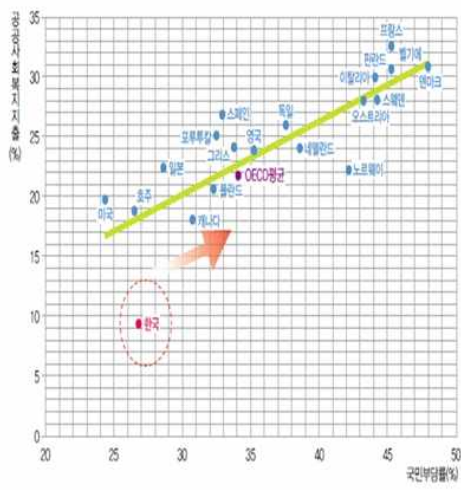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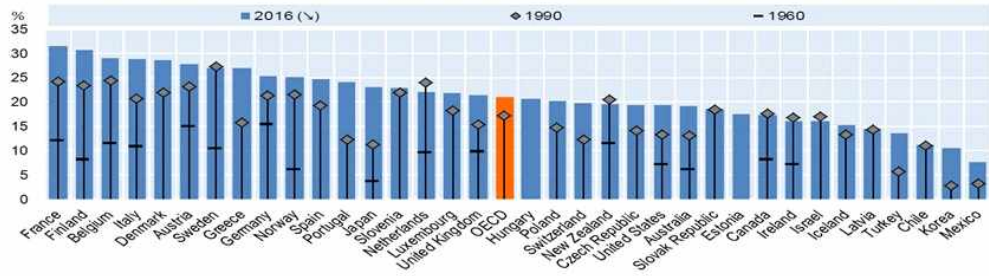
“과격이란,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가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소득의 대부분을 최상위 1%가 가져가는 상황이야말로 과격합니다. 한 집안의 경제적 부가 하위 1억3000만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 이런 미국의 현실이 과격한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a.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19년 예산0.4조원 증액)
 -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b. 1인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 건강보험: 217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
 - ▶ 고용보험: 1~2등급(50%), 3~4등급(30%) 보험료 3년간 지원 및 신청절차 간소화
- c.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경감('18)
 - ▶ '18년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의 '19년 보험료에 대해서는 30% 경감
- d. 서비스 업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김재진 (2018)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토 론 문〉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서울의 상생 지원 제도 및 방향

토론 1. 이윤희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토론 2.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이윤희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

- 재벌들의 도소매업 매출 비중 19% 차지함. 즉,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에서 재벌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동네상권들에 대기업이 침입하고 있음.
- 성수동 수제화 하는 곳에서 노조 결성됨. 텐디, 미소페 하청을 받던 개별사업자인 제화공들이 노조를 만듦. 그래서 퇴직금 요구. 여기서 이슈는 제화공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노조에 가입을 시켜야되느냐는 문제였음. 그러나 거시적인 시장의 축소 자체가 문제인데, 제화공과 공장 사장들 간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 있었음.
- 동대문과 남대문 가면, 옷 상인들이 중국 상품의 한국 상품으로 택같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

○ 서울시 정책 현황

- 서울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통해 금융 지원해주는 차원에만 그치고 있음. 4차 산업에 대한 자동화 지원 비율만 늘고 있고, 전통 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족
-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전통 소상공인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치중함.
- 제로페이도 가맹점주들 위주로 성과가 관리되고 있고, 소비자들 사용률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음.

○ 서울시 정책의 개선점

-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종업원 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둘 간의 갈등에 개입해야 할 것임.
-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시 개입은 서울형 제조업에 대해 필요함.
- 영세자영업자에 관한 데이터 부족도 보완 필요
-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은 거시적인 차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동대문과 남대문 가면, 옷 상인들이 중국 상품의 한국 상품으로 택같이 때문에 힘들

어하고 있음. 서울시 단속 강화 필요

- 소상공인이 일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 제로페이 불편함 개선 필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신발에서 일부 공정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이런 상품에 made in korea 못 붙이게 해야 할 것.

“영세자영업자와 종업원 간 갈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1. 발표문에 대한 보충질의

- 단행본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 자영업자 보고서』(2017, 후마니타스)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가맹점주(자영업자)의 노동 3권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프랜차이즈 문제(갑을병 관계)에 대해서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독자적 사업체를 운영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가맹본부와 계약 하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들 간의 교환관계에 기초한 대등한 사업계약을 맺음. 동등한 당사자들 간 관계에서 핵심은 각 당사자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임.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자라고 지칭하는 것의 핵심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있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자영업자의 핵심 특징인 자율성과 독자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것임.
-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품공급과 물류, 노동과정, 품질관리 등의 제반 사업영역에서 표준화를 필요로 함.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라는 고유한 사업모델을 가져왔음.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표준화와 통일성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점 운영과 경쟁력의 핵심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맹점주의 자유재량을 최소화함으로써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거래관계를 내재하고 있기도 함.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라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사업전략과 경쟁자산이 ‘표준화를 통한 통제’라는 가맹점에 대한 통제방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것임. 이는 오늘날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외곽에 남아있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유재량을 상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함의함(김철식, 2015).

- 고용관계의 중층화. 표준화된 모델에서 기인하는 온/오프라인 감시와 통제, 비대칭적 수익비용분담구조 하에서 가맹점주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움. 자영업자와 노동자, 거래관계와 고용관계의 경계에 위치한, 고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와 많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호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임. 그 가운데 오늘날 거래관계와 고용관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오늘날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함. 그러나 이들 청년 아르바이트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영세자영업자(을)와 종업원(병)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장하지만 개별 가맹점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개별 가맹점이 정체되는 조건에서 가맹점주는 비용최소화 전략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게 됨. 자신과 가족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맹점 노동자 고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임금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생존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임. 그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로, 그리고 다시 가맹점 노동자에게로 비용과 모순이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비용전가 연쇄가 형성되고 있음. → 비용과 위험의 비대칭적 분담구조를 바꿔내야 함(비용전가 연쇄 문제가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과 유통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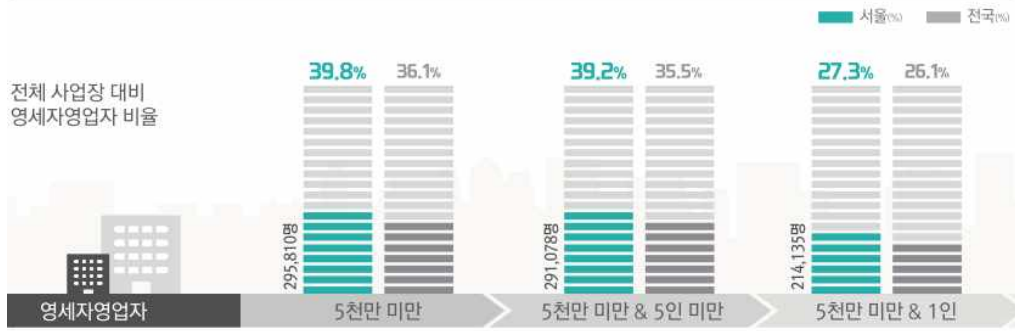
2) 노동에 주는 함의

- 한편에서 정규적,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축소되고 비정규적, 간접적 고용관계 혹은 아예 고용관계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특수고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틀 외곽에 존재하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본주의적 노사관계 내부로 포섭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양 방향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직접적 고용관계는 줄어들지만 고용관계의 영역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그 가운데 기존의 노동법이나 노동자성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일종의 비가시적, 간접적 고용관계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오늘날 노동권에 대해 기존의 틀을 넘어 보다 확장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

3. 서울의 영세자영업자 규모와 임금체불 등(박정우, 2018)

서울의 영세자영업자 규모

자료 : 통계청 | 한국사업체조사 | 2016년 MD 기준



영세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된,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를 영세사업체로 정의하고, 영세자영업자는 이 사업체의 소유주 및 포함 5,000만 원은 권익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 원인 점을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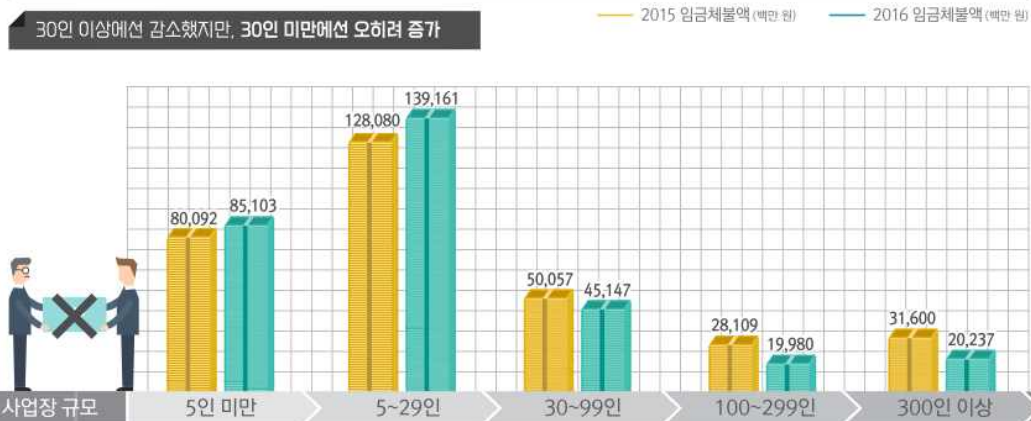
서울의 임금체불 동향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서울의 종사자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4.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을 위한 산업정책 다수, 효과는?

○ 최근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정책

-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자영업자간 과다경쟁을 막고, 다(多)진출·다(多)퇴출 구조의 자영업 생태의 개선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19년 4천명 시작, 1회 신청하면 3년간 자격 지속, 보험료 정상납부 확인 되면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0.8%에 불과한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사회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 등
- 희망광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가판대 무료로 광고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제로페이):



5. 영세자영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과 주먹구구식 노무관리 →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캠페인, 교육 등)와 노무관리 지원(컨설팅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대보험 가입 저조, 임금체불 또는 임금의 일방적 삭감과 기만, 법정최저임금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규모 고려),

법정노동시간 초과근무와 추가근무 요구, 사업주와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상시적인 노출, 부당해고(구두나 문자, 이메일로 갑자기 해고 통보), 높은 감정노동 수행

-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도 문제이지만, 체계적인 노무관리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음. 가령, 편의점에 상시화되어 있는 야간노동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야간노동수당을 지급하는 가맹점주도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그럴 경우에도 객관화된 수당 지급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가맹점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임. 노무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맹점주의 성향에 따라 주먹구구식의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것임.

6. 을-병 사이의 연대는?

- 고밀도, 고연령, 고부채 → 경쟁 격화, 사업 부진 및 폐업 위기, 만성적 생활불안
- 영세(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무직자-임시(일용)노동자-자영업자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 임금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선행 필요
- 사안별-의제별 연대와 조직화

MEMO

MEMO

MEMO

MEMO

www.labors.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천하늘빌딩 10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전화 02-376-0001